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전북 청년 유출 막아라”

이명연 도의원, 도정질문서 청년주거 지원정책 적극 시행 촉구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도지사 공약에 포함해야”

김관영 도지사, “정책 미비 인정… 기본계획에 적극 포함시킬 것”

전라북도의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도 차원의 주거비 지원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관심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은 17일 도정질문을 통해 김관영 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청년정책이 실제 도정에 있어서는 매우 부실하고 도비 예산지원도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년인구는 5년 평균 해마다 1만4,705명씩 줄어들고 있다. 이는 도 전체 감소인구의 86.8%를 차지하는 수치로 청년인구 감소가 도내 전체 인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도비 예산은 3년 평균 18.1%에 불과했으며, 핵심과제 중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2022년 기준 13개에 불과했는데, 이미지도 도비 예산은 14.2%밖에 되지 않는 등 전북도 청년정책사업 추진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 혹은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주거정책에 있어서는 김관



영 지사가 후보 시절 청년들과 청년공약 이행 정책 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사업 단 한 개의 사업만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청년이 아닌 저소득계층 대상사업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청년 16명에 3,600만원을, 2021년 청년 13명에 4,100만원을, 올해에는 청년 8명에 3,100만원의 보증금을 빌려준 것이 전부였다.

한편 최근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년주거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공공 주거정책사업의 수혜경험에 대해서는 71.8%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전북도가 종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청년주거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다각적 지원책을 세워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으며, 전북개발공사가 계획 중인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 청년을 현재 계획보다 확대해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이해찬 상임고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

시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 정부지원 방안 모색 필요”

민주 신영대 의원, “투자 대비지원 등 단계별 시스템 갖춰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7일 KBS 전주 제1리디오 페트를 전북에서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투자 대비 지원 등 단계별 시스템을 갖춘 정부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었던 광주형 일자리는 현 대자동차라는 자본력이 큰 대기업의 참여로 진행돼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며 “군산의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어려움에 부딪치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로했다.

이어 “전북도가 인구도 줄고 있고

의지를 피력했다.

신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권리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새만금 방조제 내측 해상풍력은 ‘박근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사업으로 MOU 체결부터 MOA 체결까지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가 어떻게 사업권을 가져가게 됐는지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살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어떤 정부가 했든 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확대해 나가야 하고 이를 통해 미래 산업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스

“농식품 관련기업 전북 유치 확대해야”

1시군 1농식품기업 육성
선순환구조 조성 나서야



전북도의 기업유치 중 농식품 관련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정규(행정자치위원회·임실) 의원이 17일 제3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농도인 전북을 살릴 활동 대책 마련과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전북은 명실상부 농도로 농기 6위, 농업면적 4위, 면적 대비 농업면적 비율 3위로 농업에 대한 의존과 위상이 매우 높지만 농민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박정규 도의원

격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다수의 농식품 기업은 도시보다는 시골에 있으며 낮은 매출과 작은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균형발전과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4개 시군마다 각 지역에서 자리를 대표작물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식품기업, 농촌과 연계된 기업들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육성에도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규 의원은 ‘외부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고리를 완벽히 해결하기 어렵다며 “내부에 있는 기업들 특히 농식품 기업 육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기자

“권역외상센터 필수의료인력 수급 절실”

의사 7명 사표 제출 불구
현재까지 충원되지 않아



도내 권역외상센터의 의상전문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문의 7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현재까지 충원되지 않았고, 군산의료원은 정원 46명에 현원 33명으로 13명이 결원 상태이고, 남원의료원은 9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임승식 의원이 10월

임승식 도의원

또한 “군산의료원은 정원 46명에 현원 33명으로 13명(71.7%)이나 부족하고 남원의료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28명으로 11명이 부족한 상태다”면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도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전북권역외상센터에 의사의 절반이 이탈하고 혈세를 쓸어 놓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전북도 보건의료 정책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권역응급 의료센터 및 자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시사하라”고 요구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 농업용수 부적합 저수지 9곳

환경 오염으로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저수지가 전북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광주시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 대상 시설(저수지·담수호) 975곳 중 102곳이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25곳, 경북 23곳, 전북 9곳, 경남 6곳 등으로 조사됐다. /뉴스

민주 도당, 대변인단 발표

수석대변인에 한정수 도의원

전북의 경우 총 115곳 중 9곳(V 등급 5곳·VI 등급 4곳)이 수질관리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공사는 전국의 저수지 953개와 담수호 22개를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 대상 시설로 지정해 운영·관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저수지·담수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총 1567억 62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수질관리 기준은 2017년 81곳에서 올해 102곳으로 무려 21곳이나 늘어났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축! 전주매일 창간

원하는 대로!

WONDERFUL WKU

2023학년도 WONDER한 취업!

(1인당 1,700만원 상당 교육과정 무료, 100명 선발)

6개월 교육 후 수도권 밴처기업 정규직 취업!

2023학년도 WONDER한 장학금!

(한의경과대학, 인문대학)

친구와 동반 입학 시 자기개발비 600만원!

2023학년도 WONDER한 학교생활!

(총 11개동 3,700여명 입학 가능)

신입생 기숙사 신청 시 입사 보장